

#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전

김영희 / 중앙일보 대기자

## 중국의 대북한 인식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국이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내부로부터의 북한의 붕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핵·미사일 실험, 농축 우라늄 처리 시설 공개, 남한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도발은 분명히 중국에게는 큰 짐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왜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 거의 예외없이 “너무 밀이 붙이면 북한이 무너진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사실 중국에게 북한은 대만, 티베트, 신장 위구르와 함께 핵심 이해(Core interest) 지역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무너지면 동북3성으로 쏟아져 나올 수십만 명의 난민만 해도 중국 동북부의 안보 전선을 교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붕괴의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후다. 그래서 김정은을 차기 지도자로 지명하여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을 승계할 후계자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계산과 중국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 무겁고도 엄숙한 현실이다.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빼다박은 김정은을 등장시켜도 화폐개혁 실패의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최소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한반도 안보 상황

이런 배경에서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한 오찬간담회의 석상에서 느닷없이 북한 내부의 불온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직후 말레이시아 방문중에도 북한 사회의 동요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고, 따라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라인 관리들도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 특히 통일부는 풍선 띄우기와 대북방송 등으로 북한 사회의 소요를 부채질할 뜻을 비추기까지 했다. 대북방송 강화와 풍선 날려보내기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이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다행히 해가 바뀌면서 북한 사회 동요론은 쑥 들어가고 6자회담과 남북 군사회담 이야기가 부상했다. 중국은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대신 6자회담의 틀 안으로 다시 끌어내어 중단된 9.19 합의 이행을 계속함으로써 북미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보다는 남북대화에 더 관심을 보였다. 당장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는 남한의 지원 재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목적의 하나가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장마당(시장)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 당국은 이제는 시장의 작동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공급할 물자의 조달 방법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매대를 채울 물건은 남한말고는 공급받을 데가 없다.

## 남북관계 전망

그래서 북한은 그들이 최후의 카드로 아껴두려던 군사회담까지 제의하고 나섰다. 이번 군사회담은 과거의 군사회담과는 질이 다르다. 과거의 군사회담은 김양건 부장의 통전부가 주도를 하는 모양을 띠었다. 실권이 없는 통전부 이름으로 보낸 군사회담 제안으로는 과거처럼 회담을 위한 회담, 남북대화를 하고 있다는 선전꺼리 밖에 안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군사회담에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나섰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진일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정확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인민무력부가 직접 나서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전혀 가늠을 하지 못한다. 고위 소식통은 최근 사석에서 회담장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으로 한 가지 전술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국은 6자회담을 재촉하는 중국에게 남북대화가 먼저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남북군사회담은 미국이 원하는 '남북대화 먼저'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대화의 성패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것인가에 달렸다. 성공하기 보다는 결렬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이한 회담이다. 한국은 군사회담은 어디까지나 군사회담인 만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나간다. 이것은 "사과 먼저"라는 전제조건과는 다르다. 일단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과의 표현 방법은 하나에서 열까지의 넓은 선택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한국은 군사회담에서 핵문제, 특히 최근에 등장한 농축우라늄 문제까지 다루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담은 초장에 결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과제

중국이 입장에서는 남북 군사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본회담으로 연결되고,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는 다른 분야의 회담으로 확대되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남북대화를 지켜본 뒤에 6자회담 재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자는데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말로는 화평굴기(Peaceful rise)를 외치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한국의 서해 사태에 대한 막무가내식 북한 비호, 세계 도처에서의 자원 싸움이 등에서 벌써 G2로서의 패권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중국과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놓고 자웅을 다투는 파워게임을 준비중이다. 미국은 미일·한미동맹의 연결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일본의 몰락이 미국의 전략에 차질을 주고 있다.

패권을 추구하는 'G2 중국'의 오만과 위협 앞에서 한국의 대중·대미관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외교부는 중국과를 강화하고, 중국 전문가를 특채하고, 대중외교를 외교 어젠다의 수위에 놓고 새로운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외교의 구조개혁 없이 인적인 강화는 필요한 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대중외교의 트랙을 트랙X까지 늘려 다변화하고 층층이 교류와 접촉과 대화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대중정책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내내 유지해 온 경직된 대북 입장을 완화하여 중국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호응을 맞추는 방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재촉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의 시작, 미일·한미동맹 연계전략에의 조건없는 참여는 새로운 대중외교의 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統**